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청탁금지법의 이해

감사관실



목 차



I. 부정청탁	1
1. 부정청탁의 의의	1
2. 부정청탁의 대상업무	2
3. 부정청탁의 제외대상	4
4. 부정청탁 금지 및 처벌	6
가. 부정청탁자 처벌	6
나. 부정청탁 수행 공직자등 처벌	7
다. 부정청탁 사례 정리(도표)	7
5. 부정청탁에 대한 공직자등의 대응	9
6. 소속기관장[청탁방지담당관] 조치	9
II. 금품등 수수	12
1. 금품등의 정의	12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제외대상	12
3.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처벌	16
가. 금품등 수수 공직자등 금지 및 처벌	16
나.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자 처벌	17
다. 금품등 수수 사례(도표)	18
4. 금품등 수수 금지에 대한 공직자등의 대응	21
5. 소속기관장[청탁방지담당관] 조치	22
III. 외부강의등 사례금	27
1.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27
2. 외부강의등 요청에 대한 공직자등의 대응	27
3. 소속기관장[청탁방지담당관] 조치	28
IV. 신고자등의 보호·보상	29
1.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금지	29
2. 신고자등 보호	29
3. 신고 포상 및 보상	31
V. 기탁사항	31
1. 청탁금지법 업무수행자 금지사항	31
2. 과태료 부과	32
2. 양벌규정	32

1. 부정청탁의 의의 (법 제5조)

-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게 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자와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도 포함된다.
- ‘공직자등’에서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무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참조)으로 포함되고, 무기계약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음
- ‘법령’은 법률,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법률, 명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법령’ 관련 판례>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법률 이외에 헌법 제75조 및 제95조 등에 의거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헌법재판소의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라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헌재 1992. 6. 26. 91헌마25)한 바에 따라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2001헌라1]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라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헌재 1992. 6. 26. 91헌마25]

2. 부정청탁의 대상 업무 (법 제5조 제1항)

- ①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¹⁾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②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²⁾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③ 공직자등의 인사³⁾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④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⁴⁾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⑥ 직무상 비밀⁵⁾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다.

<‘직무상 비밀’ 관련 판례>

형법 제127조의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동조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판결]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 3) 채용·승진·전보 등
- 4)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 5)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비밀

- ⑦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⑧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⑨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통상적인 거래조건을 의미한다.

<‘정상적 거래관행’ 관련 판례>

정상적 거래관행이란 행위의 의도·목적,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다른 사람이 받는 피해,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이나 사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7854 판결]

- ⑩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⑪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⑬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 ⑭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3. 부정청탁의 제외 대상(법 제5조 제2항)

- ① 법령·기준⁶⁾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③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제3자 개인의 사익을 위해 청탁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 ④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 ⑤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⑥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⑦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사회상규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6)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사회상규’ 관련 판례>

사회상규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 부정청탁 예외(합법청탁)사유에 해당되면 부정청탁이더라도 처벌대상이 아니다. (법 제5조 제2항)

【 청탁 유형별 적용규범 】

합법 청탁		부정 청탁		
		청탁 행위	청탁 유형	비고
◦ 법령·기준 제안·건의		⇒ 제3자를 위하여(통하여) 법령위반 지위·권한남용	◦ 인·허가등	
◦ 공개적으로 행위 요구			◦ 처벌 감경·면제	
선출직 공직자	◦ 공익목적 3자고충 전달		◦ 인사	
			◦ 위원 선정	
정당· 시민단체	◦ 법령·기준·정책등 제안·건의		◦ 수상·포상	
			◦ 비밀 누설	
◦ 법정기한내 처리 요구			◦ 계약	계약관련 법령으로 법령분야 한정
◦ 직무 진행사항·처리결과 확인·문의			◦ 보조금·기금등	
◦ 직무·법령관계 확인·증명 신청·요구			◦ 기관 재화·용역	
◦ 법령·제도·절차 설명·해석 요구			◦ 학교성적	
◦ 사회상규			◦ 병무	
			◦ 평가·판정	
			◦ 지도·단속·감사	
			◦ 수사·재판·중재	

4. 부정청탁 금지 및 처벌

가. 부정청탁자 처벌

-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부정청탁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23조)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 및 공무수행사인⁷⁾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 및 공무수행사인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 및 공무수행사인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 및 공무수행사인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가 다시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 및 공무수행사인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전자의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7)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부정청탁 수행 공직자등의 처벌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및 공무수행사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22조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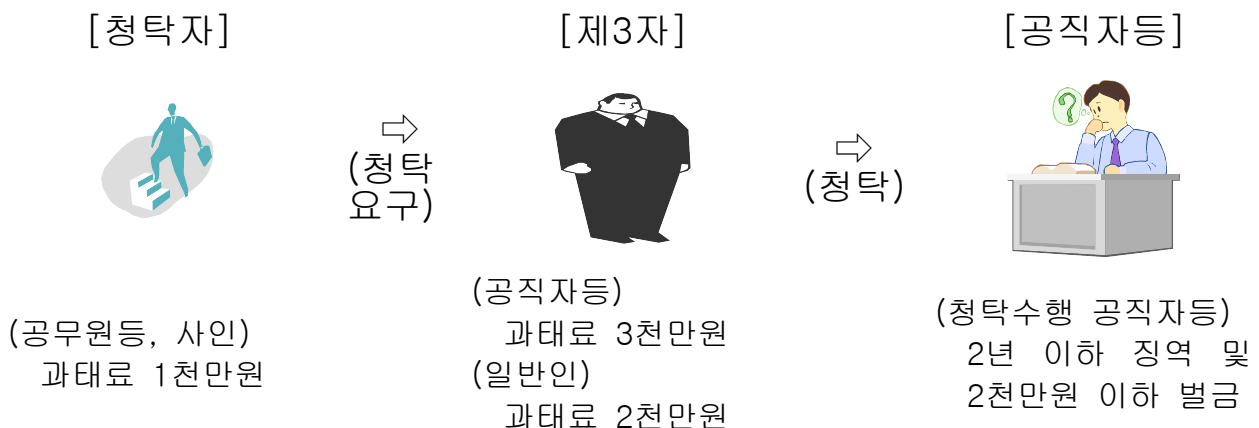
다. 부정청탁 사례 [도표]

【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 】



※ 회사를 위한 임직원의 청탁은 제3자인 법인을 위하여 부정청탁 하였으므로 과태료 2천만원 부과대상이다.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

[자신을 위한 청탁자]



⇒
(청탁)

[공직자등]



국민의 의견 개진 통로를 과도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로 제재조항 없음

(청탁수행 공직자등)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

-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공직자등이 자신을 위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한 경우는 법 제5조 제1항 (누구든지 부정청탁의 금지) 및 제21조와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인사 청탁등의 금지) 및 제11조(알선·청탁등의 금지)에 따라 징계대상이 된다.
- 부정청탁을 2회 이상 받고 서면신고를 하지 않고 청탁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신고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된다. (법 제7조 제2항 및 제21조)

5. 부정청탁에 대한 공직자등의 대응 (법 제7조)

-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거절하는 의사표시는 “청탁금지법령을 설명하고, 본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며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 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동일한 부정청탁의 예시>

- 1) 직접 1회, 제3자를 통해 1회 청탁
- 2) 2회 모두 제3자를 통한 청탁
- 3) 법인 소속 임직원 2명 이상이 각각 청탁

6. 소속기관장[청탁방지담당관]의 조치

-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7조 제3항)
-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와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대하여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치(직무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를 할 수 있다. (법 제7조 제4항, 영 제7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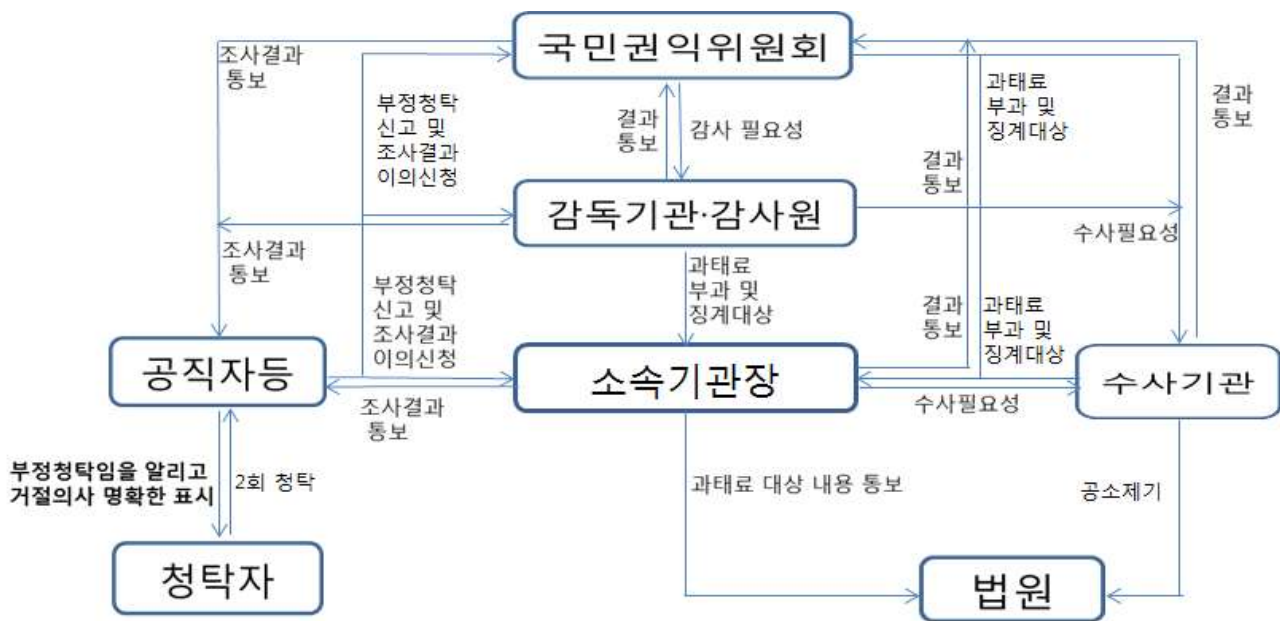
다만, 전보의 경우는 위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치할 수 있다.(영 제7조 제1항)

- 부정청탁과 관련된 공직자등이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탁방지담당관이 직접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거나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7조 제5항)

-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법 제7조 제7항)
-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제7항)

【 부정청탁 신고사항 처리절차 (시행령 제5조 내지 제13조) 】



- ※ 권익위는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 요구 가능 (법 제14조 제6항)
-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 (법 제14조 제7항)

【 부정청탁 대처·처리 세부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청탁의 대처 (법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탁받은 공직자의 명확한 거절의사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탁금지법 설명과 부정청탁임을 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청탁의 상담 (법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 작성 상담 - 청탁방지담당부서는 청탁사실 비밀 준수 - 상담결과 조치 필요사항은 기관장에게 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청탁의 신고 (영 제3조) <p>※ 신고는 공직자등(법 제7조)과 사인(법 제13조) 모두 할 수 있으며, 신고서식은 각 기관별 처리지침에 별표로 규정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 인적사항 - 부정청탁자 인적사항(법인·단체 종업원일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포함) - 신고의 경위 및 이유 -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 신고내용 증거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사항 확인등 (영 제4조,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등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내용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 -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 확보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종결처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백한 거짓 • 보완요구사항 미이행 • 신고처리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증거없이 재신고 • 조사등 진행중이거나 끝난 사항을 새로운 증거없이 재신고 •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불필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등 결과의 통보 (영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자에게 서면통보 - 권익위에서 이첩받은 사항은 권익위에 통보 병행 【통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 권익위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사항 (권익위가 알아야 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금·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거나 예측되는 사실 (신고자가 알아야 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금·보상금 지급제도 사항, 이의신청 방법 및 기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조치 (법 제7조, 영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 참여 일시정지, 2. 직무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치(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 전보는 1. 2. 4.의 조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 예외사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를 수행 공직자등 대체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3.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큰 경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탁자 조치 (영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기관 통보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법원 통보 : 과태료 부과대상일 경우 ◦ 징계 조치 : 이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징계대상일 경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청탁 관련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법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청탁 또는 부정청탁 직무수행 사실을 발견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수행 중에는 직무중지 조치 - 직무수행 후에는 직무취소 조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 공개 (영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를 고려할 수 있는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된 경우 3. 부정청탁 예방을 위해 공개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공개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정청탁의 일시·목적·유형 및 세부내용 2. 소속기관장의 조치 및 징계처분 3.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내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 기록·관리 (영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리 사항 : 신고내용, 확인등 사항, 처리내역 등 ◦ 기록·관리 방법 :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
---	---

1. "금품등"의 정의(법 제2조 제3호)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제외대상(법 제8조 제3항)

- ① 수수 제한대상이 아닌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 ②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상급공직자등과 하급공직자등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만 성립이 가능하고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상 제한이 존재한다.
- ③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에서 정한 가액(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범위 안의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상 제한이 있고, 목적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가액범위 내라도 조사대상자나 불이익 처분 대상자, 인·허가신청자 등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서도 허용하지 않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하는 것이다.

- 경조사비는 결혼식·장례식에 한하고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 가액의 범위를 5만원으로 하고, 부조금과 선물, 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 가액의 범위를 10만원으로 한다.
- 가액을 초과하는 선물과 경조사비는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수수한 전액이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

④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정당한 권원**의 판단은 용역, 자문, 계약 등 권원이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 권원이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증여외에도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 등도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외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친족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한다.

⑥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모임·단체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등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
- 소속 구성원 등은 구성원 외에도 구성원에 준하는 정도의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도 해당된다.

- 친분관계는 단순한 지연·학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야 한다.

- 어려운 처지란 질병·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주식투자 등 다른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

⑦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공식적인 행사는

- 1)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 한정한다.
- 2)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이어야 한다.
- 3)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특정 집단으로 참석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자를 고루 참석시켜야 하며 특정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을 참석시켜서는 안된다.
- 4) 비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 통상적인 범위란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행사목적, 참석자 등)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개최장소, 주체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능력 등)을 의미한다.

- 일률적은 특정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 지급은 가능하다.

⑧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⑨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제정된 법령과 기준이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를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허용되는’ 의미도 제공하는 행위만 규정되어 있고, 받는 행위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도 해당하는 지 등이 정립되어야 할 사항이다.

예)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등도 제공하는 규정만 있고, 받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는 등 청탁금지법의 수수금지 대상 금품등에 포함되는 지를 정립해야 한다.

-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시기·경위,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금품수수 유형별 적용규범 】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 가능 금품등	
금품등 유형	처벌유형	금품등 유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회계연도내 300만 원 초과 	형사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강의등 사례 	장관급 이상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하 2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로·격려·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관련 1회 100만 원, 회계연도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 	3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 	5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조사비 	1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관련 없이 1회 100만 원, 회계연도내 300만 원 이하 	수수금품등이 아니므로 신고 및 처벌 대상이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족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모임 구성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홍보용품·추첨등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법령·기준 허용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상규 허용물품 	

3. 금품등의 수수 금지(법 제8조) 및 처벌

가. 금품등 수수 공직자등 금지 및 처벌

○ 공직자등 및 공무수행사인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금품등 수수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법 제22조 제1항)

○ 공직자등 및 공무수행사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23조 제5항)

- 직무와 관련이 없고 대가성이 없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계연도 내 동일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으면 처벌대상이 된다. 또한 직무와 관련이 있고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의 수뢰혐의에 해당된다.

다만, 청탁금지법 또는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법 제23조 제5항)

- 금품등 수수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법 제23조 제5항)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및 공무수행사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23조 제1항)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법 제22조 제1항)

⇒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및 공무수행사인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23조 제5항)

다만, 청탁금지법 또는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법 제23조 제5항)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3조 제5항)

나.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자 처벌

○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공직자등 및 공무수행사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22조 제1항)



-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법 제22조 제1항)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공직자등 및 공무수행사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23조 제5항)

- 다만, 청탁금지법 또는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법 제23조 제5항)

다. 금품등 수수 사례 [도표]

【 공직자등이 개인으로부터 금품등 직접 수수 】

<div>[금품제공자]</div> 	<div>⇒ (금품 제공 및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div>	<div>⇐ 공직자등의 금품수수 대처</div>	<div>[공직자등]</div>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	신고, 금품등 반환 또는 인도, 거부의 의사를 표시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 및 약속	처벌 제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신고, 금품등 반환 또는 인도, 거부의 의사를 표시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 및 약속	과태료 부과 제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 ※ **가액 산정**은 행위시(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때)를 기준으로 실제 지불한 비용으로 하고, 실제 지불한 비용을 알 수 없을 때는 시가(통상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한다.

— <‘가액산정’ 관련 판례> —

상이한 가격자료가 있는 경우 신빙성이 담보되는 객관적, 합리적인 자료가 우선 하되,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 ※ **향응의 가액**은 당사자가 함께 향응한 경우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으로 한다. 공직자등이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제3자가 접대받은 비용도 공직자등이 접대받은 비용에 합산한다.

— <‘향응의 가액’ 관련 판례> —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 ※ 동일인으로부터 1회의 판단은
- **동일인**은 금품등을 직접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금품등의 출처가 중요하므로 자연인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




- 1회의 평가는 자연적 행위가 아니라 법적의미로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시간적 계속성과 목적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개의 행위가 1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고, 직무 관련성은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같은 의미이다.



◀‘직무 관련성’ 관련 판례▶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판례 2001. 1. 19 선고 99도57853 판결]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개인으로부터 금품등 직접 수수】

[금품제공자]		[공직자등 배우자]		[공직자 등]
	⇨ (금품 제공 및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 공직자등의 배우자 금품수수 대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	수수 금지 금품 등 반환 또는 인도, 거부 의사를 표시		처벌 제외
		수수 금지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행	처벌 제외
			신고 불이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수수 금지 금품 등 반환 또는 인도, 거부 의사를 표시		처벌 제외
		수수 금지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행	과태료 부과 제외
			신고 불이행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공직자등이 여러 가지 금품등 수수】

[제공자]	[1차]	[2차]	[공직자등]
	⇒ A금품등 제공	⇒ B금품등 제공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A와 B 금품등 가액의 합이 100만원 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 하는 금액의 과태료	A와 B 금품등 가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이고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 하는 금액의 과태료

【공직자등이 법인으로부터 금품등 직접 수수】

[금품등 출처] (법인)	[제공자] (법인 임·직원)		[공직자등]
	 (임원 A)	⇒ A금품등 제공	
	 (직원 B)	⇒ B금품등 제공	
A와 B가 상호 의사연락 하에 공동으로 제공	A와 B는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으로 A금품등 가액과 B금품등 가액을 합한 가액에 따라 처벌	A와 B 금품등 가액의 합이 100만원 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A와 B가 상호 의사연락 없이 각자 제공	A는 A금품등 가액, B는 B금품등 가액에 따라 처벌	A와 B 금품등 가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이고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 하는 금액의 과태료

4. 금품등 수수 금지에 대한 공직자등의 대응 (법 제9조)

-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9조 제1항, 제6항)

- 금품등의 제공 의사표시를 받고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고의무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다. (법 제9조 제1항 및 제21조)

-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 또는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또는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받은 금품등이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9조 제2항)

- ‘지체없이’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반환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한다.

5. 소속기관장(청탁방지담당관)의 조치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거나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9조 제3항)

-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4항)

-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와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대하여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법 제9조 제5항)

- 금품등 수수와 관련된 공직자등이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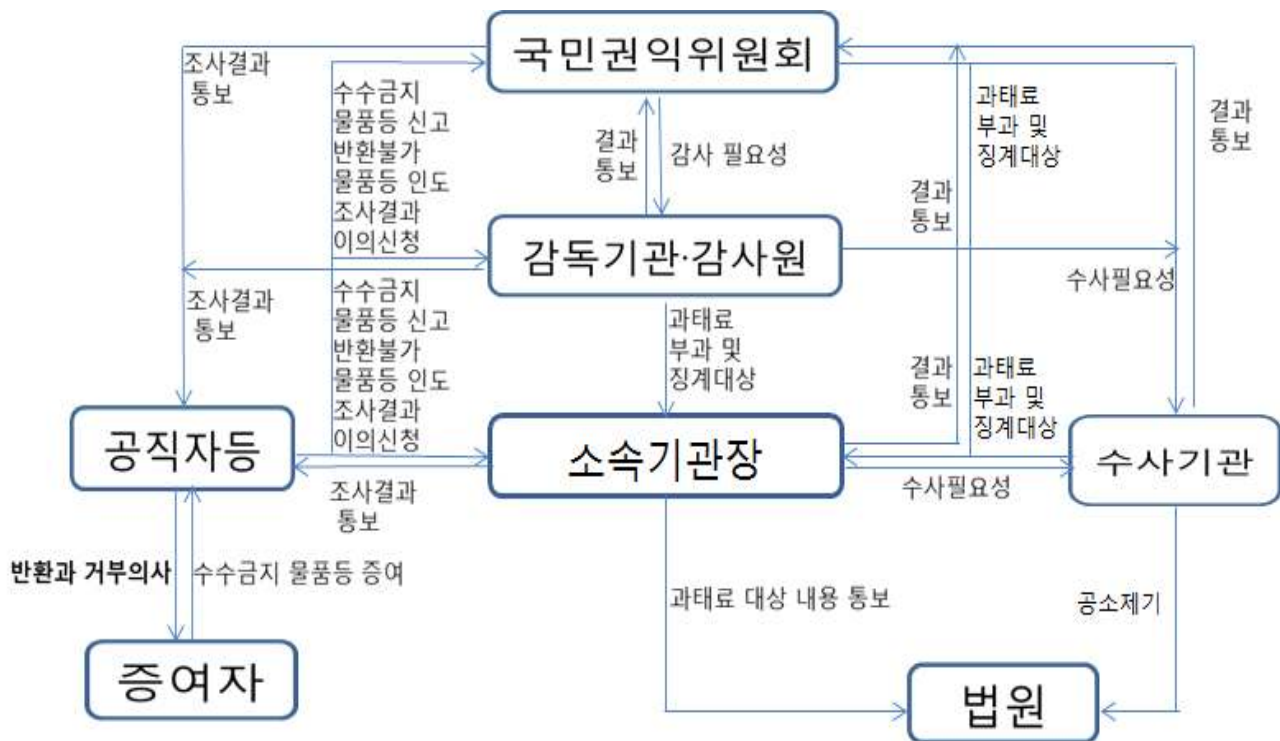
이 경우 부정청탁금지등을 담당하는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9조 제5항)

- 공직자등으로부터 수수금지 물품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법 제9조 제7항)

-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제7항)

【공직자의 수수금지 물품등의 신고 처리절차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21조)】



- ※ 권익위는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 요구 가능 (법 제14조 제6항)
-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 (법 제14조 제7항)

【수수금지 금품등 조치·처리 세부절차】

<p>○ 금품수수 공직자등 조치 (법 제9조, 시행령 제18조, 제23조, 제28조)</p> <p>※ 신고는 공직자등(법 제9조)과 사인(법 제13조) 모두 할 수 있으며, 신고서식은 각 기관별 처리지침에 별표로 규정할 것</p>	<p>○ 조치사항</p> <p>1.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 포함) 신고</p> <p>※ 신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 인적사항 - 금품등 제공자 인적사항(법인·단체 종업원일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포함) - 신고의 경위 및 이유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등의 반환 여부 - 신고내용 증거자료 <p>2. 반환 또는 인도(배우자에게 반환 또는 인도토록 조치)</p> <p>※ 인도해야할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p>3. 거부의사(배우자에게 거부의사를 밝히도록 조치)</p> <p>○ 반환·인도비용 청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등 반환·인도비용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청구
--	---



<p>○ 금품수수등의 상담 (법 제20조)</p>	<p>○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 작성 상담 - 청탁방지담당부서는 청탁사실 비밀 준수 - 상담결과 조치 필요사항은 기관장에게 보고
---------------------------------	---



<p>○ 신고사항 확인등 (시행령 제19조, 제23조)</p>	<p>○ 확인등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내용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 -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 확보여부 - 다른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p>【종결처리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백한 거짓 • 보완요구사항 미이행 • 신고처리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증거없이 재신고 • 조사등 진행중이거나 끝난 사항을 새로운 증거없이 재신고 •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불필요
--	--



<p>○ 조사등 결과의 통보 (시행령 제19조)</p>	<p>○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자에게 서면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익위에서 이첩받은 사항은 권익위에 통보 병행 <p>【통보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 권익위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사항 (권익위가 알아야 할 사항) - 포상금·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거나 예측되는 사실
------------------------------------	---

	<p>(신고자가 알아야 할 사항)</p> <p>- 포상금·보상금 지급제도 사항, 이의신청 방법 및 기한</p>
↓	
<p>○ 금품수수·신고 공직자 조치 (법 제9조 제5항)</p>	<p>○ 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 참여 일시정지, 2. 직무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치(직무공동수행자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p>※ 전보는 1. 2. 4.의 조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p> <p>○ 예외사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를 수행 공직자등 대체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3.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큰 경우
↓	
<p>○ 제공자·수수공직자등 조치 (시행령 제19조, 제37조)</p>	<p>○ 수사기관 통보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p> <p>-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공공기관에 통보</p> <p>○ 법원 통보 : 과태료 부과대상일 경우</p> <p>○ 징계 조치 : 이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징계대상일 경우</p>
↓	
<p>○ 금품수수등 관련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법 제16조)</p>	<p>○ 금품수수관련 위법직무수행을 사실을 발견한 경우</p> <p>- 직무수행 중에는 직무중지 조치</p> <p>- 직무수행 후에는 직무취소 조치</p>
↓	
<p>○ 인도받은 물품등 처리 (시행령 제24조)</p>	<p>○ 즉시 사진촬영 또는 영상 녹화</p> <p>○ 수수금지 금품등이 아닌 경우 인도한 자에게 반환</p> <p>○ 멸실·부패·변질등으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p>
↓	
<p>○ 위반행위 기록·관리 (시행령 제19조)</p>	<p>○ 기록·관리 사항 : 신고내용, 확인등 사항, 처리내역 등</p> <p>○ 기록·관리 방법 :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p>

Ⅲ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1.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법 제10조 제1항)
- ‘외부강연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에 강의는 시간당, 기고는 1건당 장관급 이상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하 20만 원을 사례금 상한액으로 하고, 상한액에는 실비로 제공되는 숙박비, 식비, 교통비를 제외하고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일체의 사례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으로 받은 수수료는 수수제한 또는 서면신고 대상 외부강의등의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금품등의 수수금지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용역·자문의 계약에 대하여 그 권원이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 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외부강의등 요청받은 공직자등의 내용

-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0조 제2항)

-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0조 제3항)
 -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법 제10조 제5항)
- ⇒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23조 제4항)

3. 소속기관장(청탁방지담당관)의 조치

-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법 제10조 제4항)
-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제7항)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조치·처리 세부절차 】

○ 외부강의등의 신고 (시행령 제26조)	○ 조치사항 1. 지체없이 서면신고 ※ 신고사항 - 신고자 인적사항 -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외부강의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명세(외부강의를 받는 경우) -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기관),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 사례금 총액 등 미리 알 수 없는 사항은 제외하고 신고하고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신고
○ 초과사례금 신고 (법 제10조 제5항, 시행령 제27조)	○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 신고 - 외부강의등의 신고사항 - 초과사례금 액수 및 반환여부
○ 초과사례금 미 반환자 조치 (시행령 제27조)	○ 신고사항 확인한 후 7일 이내 초과사례금 산출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반환토록 통보 - 신고자는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알림
○ 반환비용 청구 (시행령 제28조)	○ 초과사례금 반환비용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청구

IV 신고자등의 보호 · 보상

1.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금지(법 제15조 제1항)

○ 누구든지 신고등⁸⁾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22조 제3항)

<피신고자 보호 관련>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됨

2. 신고자등 보호(법 제15조 제2항)

○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⁹⁾를 해서는 아니 된다.

- 8) 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장 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 신고
나. 공직자등이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 소속기관장 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 신고 및 금품등 인도
다. 누구든지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할 수 있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라. 가.~나.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 9)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신고자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22조 제2항)

⇒ 신고자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외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22조 제3항)

○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법 제15조 제3항)

○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인적사항 기재 생략¹⁰⁾, 비밀보장 의무¹¹⁾, 신변보호조치¹²⁾,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의 감면¹³⁾, 불이익조치 금지¹⁴⁾,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¹⁵⁾,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 및 결정¹⁶⁾,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 및 결정¹⁷⁾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한다.

⇒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22조 제1항)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

1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1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1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

16)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17)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 제23조

- ⇒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조사에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23조 제1항)
- ⇒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한 보호조치를 신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22조 제2항)

3. 신고 포상 및 보상 (법 제15조 제1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 제15조 제5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15조 제6항)

V 기타사항

1. 업무수행자의 금지사항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8조)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22조)

2. 과태료 부과

-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법 제23조 제6항)
-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제7항)

3. 양벌규정 (법 제24조)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1.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 및 공무수행사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2.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 및 공무수행사인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
 3.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 및 공무수행사인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 (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할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관실